

### 국립대 11곳, 3년간 징계위에 총 242건 회부

# 중징계 31% 그쳐... “적절처분 필요”

중징계 중 정직 46건으로 최다  
징계사유, 음주운전 총 38건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 달라

〈국립대 11곳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현황〉

	중징계			경징계		기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보류 등
강원대		1	1	3	5	12
경북대		2	6	6	6	19
경상국립대	1	3	5	1	8	5
부산대	2		3	3	12	9
서울대	6	2	8	7	3	
인천대	1	1	1		1	
전남대		3	6	4	1	
전북대		2	5	9	11	9
제주대		2	2	2	5	9
충남대		4	7	1	3	11
충북대			2			1
합계	10	20	46	36	55	75

/강득구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38명 중 12건은 감봉에 그치고, 한명은 처분이 보류되기도 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건이 회부됐다.

국립대 11곳 분석 결과 2021년 총 64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년 93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85건으로 징계회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36건 ▲부산대

29건 ▲서울대 26건 순이었다.

반면,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에서 정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 10건 ▲해임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건이었다. 2021년 8건에서 ▲2022년 16건 ▲2023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정직 25건 ▲감봉 12건 ▲보류 1건이었다.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경우 총 4건 중 3건이 경징계 ‘감봉1월’ 처분한 반면, 전남대의 경우 총 7건 중 6건이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운영 모습.

/서울교통공사

## 서울 지하철역에 AI 통역시스템 설치

11개역서 동시대화 가능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고 자국어로 대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통역돼 스크린에 표출되는 AI 통역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역에 확대 설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11개 역에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은 1호선 종로5가역, 2호선 시청역·홍대입구역·을지

로입구역·강남역, 3호선 경복궁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광화문역·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공덕역에 마련된다.

동시 대화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 총 13개다.

이외에 지하철 노선도 기반의 경로 검색, 환승 및 소요 시간 정보와 요금 안내, 유인 물품 보관함(T-Luggage) 현황 등 부가 서비스도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

## 서울시, AI·로봇 기술개발에 367억 투자

대표 유니콘기업 육성 박차

서울시는 올해 인공지능·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대표 유니콘(거대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367억 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 개발, 실증, 시장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바이오·의료, AI,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첨단제조, 양자) 기술 사업화(183억원) ▲혁신 기술 보유 초기 기업

발굴·지원(18억원)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실증(90억원)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R&D’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그간 1년 단위로 지원이 결정돼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웠던 연구개발 예산을 최장 4년간 지급하고, 지원금 한도도 기업당 최대 2억원에서 8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지원 강화

전문지원 기관, 42곳 → 55곳 확대  
학교 찾아가는 서비스 11곳 → 31곳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적용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가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대 ERID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중 한 곳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국민대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에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형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3600억 투자

(5년간)

가평·양평 등 6개 시군 대상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비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4)보다 422억 원 증가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했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도는 1분기 중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경기도청 전경

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현재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